

# 위기 경고하기 혹은 위기 초대하기

언론이 재구성한 2008년 9월 위기설을 중심으로\*

김성해\*\* · 김춘식\*\*\* · 김화년\*\*\*\*

한국 사회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설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위기설은 실질적인 금융시장 폭락으로 전이되는 ‘자기실현적 위기’ (self-fulfilling crisis)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위기설은 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고비용을 감수해야 할까? 이 연구는 이에 경제위기설이 진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닌 ‘진실효과’를 갖는 담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담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2008년 9월 위기설을 분석 사례로 정했고, 최종적으로 118개의 기사를 ‘도약기, 성숙기, 후퇴기’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디어담론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기도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재구성은 프레임의 전략적 활용, 시장에 대한 자의적 해석, 위기설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같은 담론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 및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제어: 담론정치, 경제위기, 미디어담론, 프레임, 담론의 진화, 자기실현적위기, 정파성, 담론전략, 담론경쟁, 대안담론

## 1. 문제제기

2008년 가을과 2009년 봄에 걸친 9월과 3월 위기설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위기설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정부는 위기설을 전하는 전령사인 국내의 언론을 탓했고, 언론은 정부의 무능력과 책임회피를 비판했다. 불신의 골이 깊어진 국민들은 정책담당자, 기성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을 의면하고 ‘미네르바’로 대표되는 익명의 사이버 논객들에 더 열광했다. 물론 이번 위기설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외국인의 채권 만기가 9월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역수지도 몇 달째 적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도 2,100억불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 주식과 원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꾸준히 이어졌고, 외신들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199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된 상태였다. 1997년 6월 당시 333억불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 9월 기준으로 2,396억불이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도 1997년의 264%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68.1%에 불과했다. 금융권의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BIS)도 1997년의 7%에서 2008년 6월에는 11.36%로 개선된 상황이었다(한국은행, 2008). 더구나 채권만기일을 맞아 외국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단기유동성

\* 이 논문은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한 <경제위기와 언론보도> 심층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를 활용, 재구성 한 것임을 밝힙니다. 논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평가와 격려를 해 주신 세분의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언론재단 객원 연구위원(visionofsea@hotmail.com)

\*\*\* 한국외대, 교수(chunsi@hufs.ac.kr)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hwanyeon.kim@samsung.com)

문제가 우려된다는 위기설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부족했다. 즉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처럼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 중 9월 만기분 8조 7000억원 중 1조 7000억원이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되어 그 비중은 7조원으로 축소되었고, 9월 만기도래 국고채 (약 19조원)의 상환자금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 2008).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에서 위기설은 반복되고, 그 파장이 금융시장과 경제현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또 위기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사회적 통념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언론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반복되는 위기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풀고자 하는 의도에서 먼저 최근의 위기설이 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효과’를 가진 ‘담론’이라고 가정했다. 즉 여기서 ‘위기설’은 “특정 국면에서 형성된 담론구성체임과 동시에 대중들의 상식 세계와 과학적 (경제학적 · 정치경제학적 지식) 지식의 세계를 접합시킴으로써 동의와 지지를 얻어내는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영역”으로 이해된다(강명구, 1994, 93쪽). 그 다음, 담론으로서 위기설이 어떤 ‘과학적 언설’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프레임’ (frame)의 개념을 동원했다. 프레임은 통해 담론에 내포된 핵심 논거들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위기설 담론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전제(가정)들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위기설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이해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재구성되는 위기설 담론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반복되는 위기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 및 언론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 담론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 2. 이론적 논의

### 1) 담론으로서의 위기설

첫째, ‘9월 위기설’을 담론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당시 위기설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기서 위기설은 ①과학적 진리에 반하는 허위의식이 아니라 ‘과학적 언설’을 통해 구성된 ‘지식’으로서 진실효과를 가지며; ②모순과 억압적 관계를 단순히 ‘은폐’하는 역할이 아니라 특정한 인식과 가치관을 기초로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나아가 현실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며; ③경제적 생산양식 또는 지배계급에 의해 ‘결정’되고, ‘담힌’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의 경쟁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열린’ 체계로 이해되며; 그 결과 ④개별 주체는 담론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이 담론의 창조적 생산자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기형, 2006; 조영권, 2006).

둘째, 일관된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 담론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며, 복합적인 층위를 담론 내부에 포함한다(Bell & Garrett, 1998; Dijk, 1988; Fairclough, 1995). 담론은 일종의 빙산구조로서 가장 밑바닥 층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가정(presupposition)으로 조합된 세계관(world view) 또는 입장(position)이 자리를 잡는다. 그 위층에 집약적 의미군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가치(core values)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진 프레임이 놓인다. 그리고 몇 단어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구호’(slogan)나 이미지의 집합체인 ‘상징’(symbol)이 담론의 꼭지 부분에 자리를 잡는다(김성해 외, 2007; 서덕희,

2003). 그러나 기존의 많은 담론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과학적인 언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은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에서부터, 정부가 발행한 문서, 법정의 판결문이나 정부의 포고령, 각종 미디어에 실리는 사실, 평론과 기고문,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기업가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나 연설문, 의사나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다양한 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이기형, 2006, 108쪽).

셋째, 담론은 역사성을 갖는다. 담론은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경쟁하고, 성숙하고, 강화되거나 아니면 소멸한다. 예를 들어, 반일담론은 해방 이후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서, 한민족의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문화정책을 통해 성숙되고, 1990년대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화해 정책을 통해 약화되었다가,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신사참배 사건 등으로 다시 강화된다(이동후, 2003). 외환위기 담론도 이와 비슷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외환위기에 대한 지식, 태도, 느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 구제금융 이후 외환위기 담론은 집중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었다. 그러나 1998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 담론은 미국 음모설과 같은 주장들과 담론경쟁을 해야 했고, 브라질과 러시아로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자기수정 과정을 겪어야 했다. 외환위기 담론은 그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화된 인식과 태도(structure of reference and attitude)와 결부되었고, 점차 ‘내 탓이오’(Mea Culpa)라는 구호로 압축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변했다(Hall, 2003). 그리고 이 담론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를 잡는 한편, 학교 교과서,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및 드라마와 소설 등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담론은 특정한 정치적 효과 또는 목적을 위해 ‘의식·무의식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된다(강명구, 1994; 이향진, 2003). 다시 말해, 담론은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얻거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반대세력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김대영, 2003; 이승민, 2003; 홍성구, 2004). 미셸 푸코(Michael Foucault), 스투어트 홀(Stuart Hall),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와 노먼 페어클로우(Norman Fairclough)와 같은 비판적 담론분석가들은 이에 따라 “명백한 사회,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의 기저에 깔린 권력 관계를 밝혀내고 특히 사회정치적 지배를 재생산하고 그에 도전하는” 담론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서덕희, 2003, 65쪽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담론은 특정한 ‘정치적 후원세력’과 무관하지 않았고, 이는 2008년 촛불시위를 둘러싼 담론 경쟁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촛불시위를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광우병, 쇠고기 협상과 미국’에 인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이들은 담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정보, 신화, 이미지, 고정관념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했다.

## 2) 미디어담론과 프레임

담론은 생산자와 소비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담론은 정부기관과 싱크탱크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담론(policy discourse), 경제단체와 산하 연구소에서 나오는 기업담론(business discourse)과 학계와 독립연구소에서 생산하는 학술담론(research discourse) 등으로 구분된다. 소비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의사, 법조인과 경제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담론(special discourse), 대중매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지적수준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담

론(public discourse) 및 누구나 쉽게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중담론(mass discourse)으로 나누어진다. 담론은 또한 학문영역에 따라 경제담론, 정치담론, 교육담론, 예술담론 등으로 구분되거나, 관심주제에 따라 교육붕괴담론, 몸짱담론, 신세대담론, 외환위기담론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미디어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공공담론’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내포된 것으로 알려진 “프레임, 특정한 입장, 사회적 실천들 및 핵심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성해 외, 2007, 43쪽). 그렇다면 담론 연구에서 미디어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미디어담론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담론을 통해 ‘지적 설득과 동의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미디어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공개적으로 소통되는 중추적인 광장으로 기능한다. 즉 미디어는 종교, 정당, 시민단체, 과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포럼의 참가자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중추적 포럼(meta forum)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접하는 상징적 무대(symbolic stage)로 기능한다(Gans, 1979; Gamson & Modigliani, 1989). 미디어는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후원세력이 담론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장악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

미디어담론은 두 번째로 객관성과 균형성이라는 전문적인 직업윤리를 토대로, 집단적 협업을 통해, 정교하게 재구성된 공공지식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담론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로 인식되며, 지적인 설득 및 이를 통한 정치적 효과의 달성에 있어 다른 형태의 담론보다 효과적이다. 서덕희(2006)는 이런 맥락에서 “대중매체에 의하여 형성되는 공적 담론은 어떤 현상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진술의 체계를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그 진술의 체계를 일상담론으로 매개함으로써, 생활세계의 담론을 체계의 담론으로 식민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79쪽).

미디어담론은 세 번째로 페어클로우(Fairclough, 1998)가 말하는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및 사회적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담론으로 언어학적 담론전략은 물론 사회적 실천을 파악하기에 유리하다. 즉 언론에 의해 생산되는 담론은 사실에 대한 ‘취사, 선택, 차별 및 배제’를 통해 재구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규범적 가치와 제도적 실천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담론은 다양한 후원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통합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과 가치체계를 생산하는 과정” 및 “그를 통해 제안되는 구체적인 정책, 법안, 관행과 같은 사회적 실천”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강명구·박상훈, 1997, 125쪽; 김성해 외, 2007; 47쪽).

그러나 미디어담론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는 ‘언어학, 인지심리학, 사회언어학 및 후기구조주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전공 학문의 성격에 따라 그 분석 방법도 달랐다. 가령, 언론학 전통에서 담론 연구는 ‘특정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하기(agenda-building), 특정한 방식으로 틀짓기(framing), 특정한 잣대로 평가하기(priming) 그리고 정보원의 전략적 활용(sourcing)’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양정혜, 2000; 김성해, 2006). 반면, 문화연구 전통에서 이는 ‘권위화(authoriz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서사화(mythopoesis)’ 등을 분석하거나 다양한 논거와 주장들이 접합되어 있는 구조 및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된다(백선기, 2005; 홍성구, 2004).<sup>1)</sup> 언어학적 전통에서도 담론연구는 ‘텍스트적 실천’(textual practices) 즉 “특정 현상을 지시하는 데에 어떤

단어를 쓰느냐, 각 어휘들을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동사로 결합하느냐, ‘그러므로,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 통해 문장들을 어떻게 구조화하는가, 서로 다른 유형의 텍스트들을 한 텍스트 내에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집중된다(서덕희, 2003, 62쪽).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접근에서 공통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연구에서 말하는 도덕적 평가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권위화는 정보원의 선택적 활용 전략의 한 부분이고, 접합이라는 개념도 틀짓기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또 언어학적 전통에서 분석하는 특정한 단어, 형용사 및 접속사 등은 ‘일관된 논리체계 또는 세계관’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또는 인식의 틀(즉 프레임)을 통해 인간은 외부세계를 인식하게 되며, 미디어담론 분석에서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언론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프레임은 경제학에서는 ‘이론 혹은 모델’로, 정치학에서는 ‘학설 또는 세계관’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에서 아시아 위기를 설명하는 ‘정책오류’(bad policy)와 ‘시장공황’(market panic) 이론 또는 제1세대, 2세대와 3세대 모형(model)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이론과 모델은 공통적으로 위기의 원인과 대응전략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라는 측면에서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론과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은 “자신들에게 닥친 외부적 환경을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고, 나아가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즉 의미화(sense-making)의 필수적인 부분이다(Weick, 1999, p. 42).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이에 따라 “미디어가 제공하는 담론의 특정 시각(즉 프레임)과 동일시함으로써 미디어가 제공하는 특정한 주체로 구성’되거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특정 현상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틀”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Hall, 1997, p.44).

물론 이준웅(2009)이 지적하는 것처럼 프레임은 ‘특정한 가치’ ‘보도태도’ ‘세계관’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도 ‘일화적 및 주제적’ 또는 ‘인간흥미, 갈등, 개인’과 같은 프레임을 연역적으로 적용하거나 창문틀, 그림틀, 건축물 골조틀과 세계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 프레임 중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텍스트 내에 있는 핵심 주장들을 논리적인 연관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특정한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또한 복수의 프레임이 중복적으로 사용된 경우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텍스트에 내재된 프레임과 수용자들이 인식하는 프레임도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규정, 원인진단, 해결책 제시 및 전망제시’ 등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을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 몇 개의 핵심적인 의미 군집으로 묶은 후 귀납적으로 프레임을 구성할 경우 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아엔가(Iyengar, 1991)의 실험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건축물의 골조에 해당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실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1) 특정한 기사가 뉴스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기사의 선택, 가공 및 편집 등의 다양한 저널리즘적 실천이 특정한 텍스트에 접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접합은 객관적 현실의 변화 및 기자들의 의 학습과정 (learning experience)을 통해 ‘담론’의 구성물 (논리, 주장, 가치, 입장 등)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3. 분석사례,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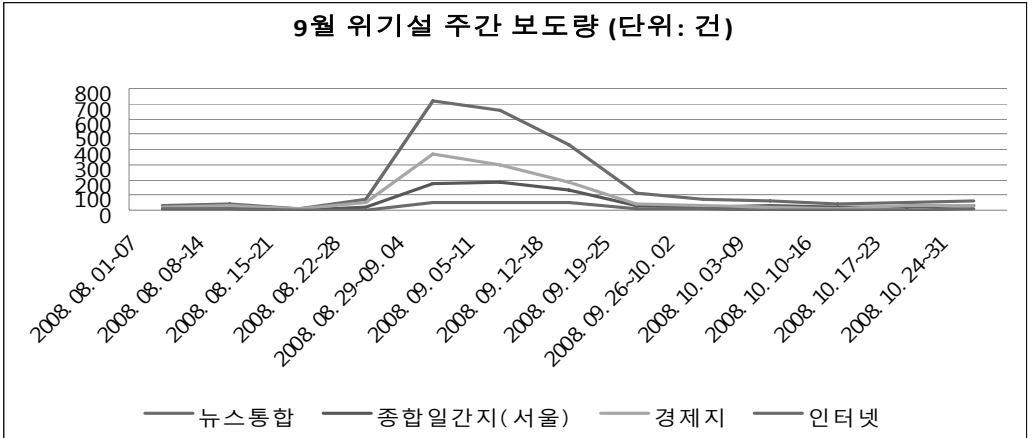
#### 1) 채권시장발 ‘9월 위기설’의 이해

떡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폭풍우를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다. 2008년 8월을 고비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및 원화에 대한 매도 규모는 확대되어 갔다. 1997년 외환위기의 상흔(trauma)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외채의 급격한 상승과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8조원 규모의 채권 만기일이 9월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자금이 일시에 한국을 빠져나감에 따라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고, 외환시장의 단기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설은 그럴듯한 주장이었다.

채권시장발 9월 위기설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경제학자와 민간 경제연구소도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김태동 교수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시장의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신문, 08/8/13).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같은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도 부동산 버블, 중소기업 부채, 가계부채, 단기유동부채의 증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겨레, 08/7/29; 내일신문, 08/8/11).

그러나 국내 기관투자자, 대기업 경제연구소 및 정부와 산하연구소에서 이 위기설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예로, 위기설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 8월 초 ‘우리투자증권’은 “9월 만기 도래분이 이미 6조원대로 줄었다”는 점과 “외국인 채권투자는 환차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2년 미만의 국채 및 통안채를 매입하는 재정거래”라는 점에서 “외국인 채권관련 악재는 현 시점에서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무관하게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삼성경제연구소(2008) 역시 “9월 위기설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 5000억 원대에 달했고, 채권만기일 하루 전인 9월 9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1조 4273억 원이었다(금융감독원, 2008).

공식적으로 ‘9월 위기설’은 2008년 5월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2008년 6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당시 위기설은 2008년 8월 31일까지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9월 위기설은 2008년 9월 1일부터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되었고, 그 관심은 채권 만기일인 9월 10일과 11일을 고비로 급속히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및 외환시장은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iman Brothers)가 파산한 9월 15일 이후 다시 일대 혼란에 직면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자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금 회수와 더불어 달러사재기와 역외 투기세력들까지 결합되면서 환율은 1,600원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3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 상황은 외국인이 대규모로 국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2009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1> 9월 위기설 보도량의 변화

## 2) 자료수집

담론으로서 위기설을 가정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이 담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기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슈화한 언론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 접어들어 정부의 정책에 가장 협조적인 <동아일보>를 선정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동일한 논리에서 작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선택했다. 즉 ‘보수적 독자층과 진보적 독자층’의 인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신문을 선택했다. 또 9월 위기설에 주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층은 ‘경제전문지’를 주로 읽는 ‘화이트칼라’이며, 이들이 여론주도층 (opinion leaders)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경제전문지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매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 전달을 목표로 창간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머니투데이>를 선정했다.

끝으로, 주류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터넷 언론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개연성을 고려했다. <이데일리>와 <오마이뉴스>를 선택한 것은 이런 이유였으며, 이들 신문은 ‘위기설’과 관련된 기사도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또 위기설의 진화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 시기를 도약기 (8월1일~8월30일), 성숙기 (9월1일~9월30일), 후퇴기 (10월1일~11월30일)로 구분했다. ‘원인, 해결책 및 교훈’과 같은 의미화 정보를 확인하기에 유리한 ‘기획, 분석, 해설, 칼럼, 사실’ 기사를 중심으로 샘플을 수집했으며, 보도빈도가 높았던 도약기의 경우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중심으로 임의표집을 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된 기사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9월 위기설 샘플

| 시기구분 | 분석신문 |      |      |       |      |       | 합계  |
|------|------|------|------|-------|------|-------|-----|
|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머니투데이 | 이데일리 | 오마이뉴스 |     |
| 도약기  | 4    | 0    | 3    | 5     | 5    | 2     | 19  |
| 성숙기  | 9    | 12   | 13   | 9     | 9    | 14    | 66  |
| 후퇴기  | 7    | 7    | 4    | 6     | 5    | 4     | 33  |
| 합계   | 20   | 19   | 20   | 20    | 19   | 20    | 118 |

### 3)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위기설’이라는 담론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주장, 논거와 시각이 접합되며, 나아가 어떤 가정 또는 전제가 함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을 위해 질적인 담론분석 방법만을 활용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전체 샘플의 10%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위기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주요 주장들을 추출했다. 그 다음, 이들 주장을 크게 ‘원인과 대응책’으로 분류하는 한편,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주장끼리 묶음으로써 다음의 <표 2>와 같은 프레임을 구성했다.<sup>2)</sup>

<표 2> ‘원인’ 프레임

| 프레임 명칭 | 진단·처방 정보 및 함의  |
|--------|--|
| 정책실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못된 인사, 오락가락한 정책, 잦은 말실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li> <li>▶ 정책실행도 붕괴, 각론과 실천의 부족, 과거 개발연대식 정책</li> <li>▶ 신자유주의적 정책, 시장만능의 규제완화, 고소득-부유층 위주 정책</li> <li>▶ 외신 대응책 실패, 자화자찬과 낙관론만 퍼는 정부, 교만한 정부</li> </ul> |
| 제도적결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규모의 경제가 지나치게 개방되어 있는 구조, 금융시장의 취약한 구조 및 높은 수출의존도</li> <li>▶ 불충분한 재벌개혁과 투명성 부족, 노사정 신뢰부족, 사회안전망 미비</li> <li>▶ 정치적 분열, 후진적 노사문화, 대북관계 악화</li> </ul>  |
| 펀드멘탈악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실적악화, 수출감소, 부동산 부실</li> <li>▶ 경상수지 누적적자, 자본수지 대규모 적자, 대외채무증가</li> <li>▶ 자영업자몰락, 고용대란, 물가폭등, 빈익빈부익부, 하이퍼인플레이션</li> </ul>   |
| 글로벌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헤게모니 부재,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li> <li>▶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 글로벌 자금 순환</li> <li>▶ 북한 로켓 발사 등 대외악재</li> </ul>  |
| 시장정서악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신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보도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증폭</li> <li>▶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li> <li>▶ 심리적 패닉으로 인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li> </ul>  |

2)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위해 모두 3명의 대학원생이 코디너로 참가했다.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일치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반복 코딩을 실시했다. 홀스티(Holsti) 공식을 통해 얻은 프레임의 일치도는 0.9%였다.



프레임에서 특정한 ‘진단’과 ‘처방’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즉, ‘정책실패’라는 프레임에 따르면 9월 위기설은 정부의 리더십 부족, 일관성 없는 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 및 교만하고 소통할 줄 모르는 정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위기의 해결방안은 ‘시장정상악화’ 프레임에서 유추되는 ‘유언비어 세력의 발본색원과 외신의 왜곡보도를 바로잡는 노력’이 아닌 ‘구시대적 관치금융을 중단하고, 신뢰를 상실한 정책담당자를 해임’하는 데서 찾아진다. 위의 <표 2>에 있는 프레임은 이에 따라 ‘원인’ 정보를 중심으로 한 의미 군집이긴 하지만 ‘해결방안과 교훈’에 대한 함의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 ‘진단정보’와 ‘처방정보’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고, 프레임들이 중복적으로 포함된 경우도 흔하다. 이 연구는 이에 프레임을 중복으로 코딩하는 한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중심으로 ‘책임’ 프레임을 별도로 구분했다. 책임소재는 크게 ‘구조와 행위자’로 나눌 수 있고, 크게 ‘글로벌시스템, 시장참여자, 정부, 외국투자자 및 위기조장세력’ 등으로 분류되었다.

<표 3> ‘책임’ 프레임<sup>3)</sup>

| 프레임 명칭 | 책임주체 및 해결방안  |
|--------|--|
| 글로벌시스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 글로벌 자본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li> <li>▶ 글로벌 경기의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방안</li> </ul>    |
| 시장참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들의 집단심리 및 집단행동</li> <li>▶ 시장참여자들의 이성 회복 및 보다 신중한 투자 패턴</li> </ul>                  |
| 정책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정책 실패, 리더십 상실,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li> <li>▶ 정책담당자 교체, 정책 리더십 회복</li> </ul>             |
| 외국투자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li> <li>▶ 외국계 투자자 유인 정책 및 신뢰 회복 조치 (규제완화, 홍보강화 등)</li> </ul> |
| 위기조장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시장 교란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li> <li>▶ 피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 투기세력에 대한 감시 강화</li> </ul>       |

담론의 질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분석’을 넘어서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위기에 대한 규정, 원인과 진단, 해결방안과 전망 등이 복잡하게 사용된 경우 ‘무엇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시각을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함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칼럼, 사설, 기획기사의 경우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이는 ‘질적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위기설에 대한 정의 및 평가, 시장(여론)에 대한 태도, 특정 해결책 및 관점’과 같은 항목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9월 위기설에 대한 미디어담론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 연구문제 2: 9월 위기설의 등장과 소멸이라는 과정에서 원인프레임과 책임프레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원인프레임과 책임프레임을 둘러싸고 미디어 간 담론 경쟁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가?

3) 대부분의 기사에서 9월 위기설과 관련된 원인 정보는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책임소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원인’ 프레임(252개)에 비해 ‘책임’ 프레임(135개)의 빈도는 높지 않았다.

연구문제 4: 위기설 담론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언론의 담론전략은 어떤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 4. 분석결과 및 해석

### 1) 담론구조의 이해

위기설 담론은 먼저 ‘위기설’을 둘러싼 다양한 가정들로 조합된 세계관에 의해 규정된다. 위기설을 그럴듯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담당하는 긍정적 환경감시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점과 위기설을 괴담 또는 집단적 착시로 보는 관점을 통해 위기설이라고 하는 담론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위기설을 수용하는 관점에는 위기설 자체를 무시하려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 위기설을 믿는 시장정서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위기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는 위기설에 부화뇌동하는 시장정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위기조장 세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금융시장의 여론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담긴다. 이를 고려할 때, 위기설 담론은 다음의 <표 4>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4> 위기설 미디어담론의 구조

| 담론층위      | 세부분류        |        |            |             |        |
|-----------|-------------|--------|------------|-------------|--------|
| 위기에 대한 입장 | 수용          | 중립     |            | 거부          |        |
| 對정부태도     | 부정적         | 냉소적 비판 |            | 비판적 지지      |        |
| 對시장정서     | 우호적         | 중립적    |            | 비판적         |        |
| 프레임       | 정책실패        | 제도적결함  | 핀드멘탈악화     | 글로벌리스크      | 시장정서악화 |
| 시기        | 성숙기         | 도약기    | 발아기        | 후퇴기         | 소멸기    |
| 매체        |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        | 매일경제, 이데일리 |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        |

위의 <표 4>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세계관의 윗부분에 위기설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지적 지도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이 지도(즉 프레임)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강조와 배제, 전략적인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정당화 및 대립하는 주장이나 프레임을 반박하기 위한 논증들의 배열 등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에 주목하는 ‘정책실패’와 ‘제도적결함’ 프레임은 위기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입장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고, 반대로 ‘거부’하는 입장은 ‘시장정서악화’ 및 ‘글로벌리스크’ 등의 프레임에 의해 지지된다. 담론의 구조는 또한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성은 물론 현실적 상황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가 위기 가능성을 가장 많이 주장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 시장정서에 대한 긍정 및 높은 비중의 ‘정책실패’와 ‘제도적결함’ 프레임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매체의 정반대에는 <동아일보>와 <머니투데이> 등이 있었다.

끝으로, 위기설의 분수령이었던 9월 10일을 전후로 담론의 성격도 변했다. 9월 위기설이 처음

등장하는 ‘발아기’ 동안 위기설에 대한 전망이나 입장은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위기설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2008년 8월에 해당하는 ‘도약기’에 위기설은 보다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위기의 정점을 넘긴 직후지만 여전히 위기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2008년 9월 중순 이후(즉 후퇴기)에도 ‘위기설’은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 물론 발아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도약기’는 위기의 가능성이 보다 긍정적인 쪽에 가깝고, ‘후퇴기’에는 보다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는 차이는 있다. 또 위기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성숙기’와 위기설이 끝난 것이 거의 확정된 ‘소멸기’에서 위기설에 대한 입장은 정반대였다<sup>4)</sup>.

## 2) 프레임의 이해

인지적 지도에 해당하는 프레임 역시 살아서 반응한다. 그리고 미디어담론이 진화하는 이유는 언론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 ‘합리적 설득을 통한 대중의 지지’ 획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표 5> 9월 위기설 ‘원인’ 프레임

|     | 펀드멘탈악화 | 정책실패 | 제도적결함 | 글로벌리스크 | 정서악화 | 합계       |
|-----|--------|------|-------|--------|------|----------|
| 도약기 | 29%    | 10%  | 2%    | 27%    | 32%  | 100(41)  |
| 성숙기 | 17%    | 27%  | 6%    | 23%    | 27%  | 100(144) |
| 후퇴기 | 29%    | 21%  | 10%   | 24%    | 25%  | 100(67)  |
| 합계  | 20%    | 22%  | 7%    | 24%    | 27%  | 100(252) |

9월 위기설의 경우, 도약기 동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서악화’ 프레임 (32%)이다. ‘펀드멘탈악화’ (29%)와 ‘글로벌리스크’ (27%) 프레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 동안 위기설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10%),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의 과잉반응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높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된 2008년 9월 1일부터 언론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실책과 리더십 부족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성숙기에 접어들어 ‘정책실패’ 프레임은 무려 17%나 증가했으며, ‘정서악화’ 프레임의 비중은 5% 정도로 감소했다. ‘펀드멘탈악화’와 ‘글로벌리스크’ 프레임의 비중도 역시 줄어들었고, 한국 경제의 체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비중은 4% 정도 증가했다.

또 성숙기 동안 ‘정서악화’와 ‘정책실패’ 프레임 비중이 27%였고 ‘정책실패’ 프레임의 비중은 17% 이상 증가했다. 언론사들 간 담론경쟁이 보다 본격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기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측과 위기설을 괴담으로 치부한 측은 처음부터 날카롭게 대립했다. 하지만 ‘정책실패’ 프레임의 비중이 이 기간에 급증한 것은 위기설의 가능성을 낮게 봤던 일부 언론에서도 정부의 정책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4) 발아기와 소멸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발아기와 도약기를 묶어 ‘도약기’로, 후퇴기와 소멸기를 묶어 ‘후퇴기’로 구분했다.

상당한 ‘신뢰 상실’을 겪었다는 것은 후퇴기에 접어들어서도 ‘정책실패’ 프레임의 비중이 이전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와 달리, ‘위기설’을 무조건 거부하는 입장은 줄고,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하려는 입장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후퇴기에서도 ‘정서악화’ 프레임의 비중은 여전히 25%대에 머물고 있고, ‘제도적 결함’의 비중은 처음에 비해 11% 이상 높아짐으로써 위기설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2008년 10월 23일 코스피 지수가 900대로 폭락하고,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넘어서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퇴기에 들어 언론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펀드멘탈의 악화, 글로벌리스크 및 한국 경제의 제도적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하기 시작했다.

2008년 9월에 우려되었던 채권시장발 위기는 없었다. 2008년 10월 이후의 금융시장 불안도 냉정하게 보면 ‘9월 위기설’과는 무관했다. 즉 당시 금융시장의 혼란은 처음 알려진 9월 위기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주요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자금이탈 현상이었다. 그러나 9월 위기설은 9월이 아닌 10월 이후에 현실화된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고, 정부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표 6> 9월 위기설 ‘책임’ 프레임

|     | 정부책임 | 글로벌책임 | 시장책임 | 외국인책임 | 위기조장세력 | 합계       |
|-----|------|-------|------|-------|--------|----------|
| 도약기 | 21%  | 44%   | 7%   | 21%   | 7%     | 100(14)  |
| 성숙기 | 42%  | 28%   | 14%  | 11%   | 5%     | 100(79)  |
| 후퇴기 | 33%  | 33%   | 7%   | 17%   | 10%    | 100(42)  |
| 합계  | 27%  | 31%   | 12%  | 14%   | 6%     | 100(135) |

위기설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도약기 동안 ‘위기설’에 대한 평가와 정부에 대한 입장은 ‘중립’에 가까웠다. 위의 <표6>에서도 이 기간 동안 위기설이 발생하게 된 그리고 위기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있었다(44%). ‘정부책임’도 비교적 높았지만 ‘외국인책임’과 동일한 비중(21%)이었다. 그러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심리적 왜곡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책임’의 비중은 무려 21%나 증가했으며, 외국인 책임을 지적하는 비중은 10% 폭으로 줄었다. 위기설을 계기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정부책임’의 비중이 후퇴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높은 33%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위기조장세력’을 비난하는 비중은 성숙기에는 줄고 도약기에도 소폭(3%)으로만 증가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위기설이 반드시 정부의 실책에서 초래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실책과 무능력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매체별 ‘원인’ 프레임

|       | 펀드멘탈악화 | 정책실패 | 제도적결함 | 글로벌리스크 | 정서악화 | 합계       |
|-------|--------|------|-------|--------|------|----------|
| 동아일보  | 20%    | 27%  | 4%    | 18%    | 31%  | 100(45)  |
| 경향신문  | 16%    | 28%  | 7%    | 29%    | 20%  | 100(44)  |
| 매일경제  | 22%    | 22%  | 5%    | 27%    | 24%  | 100(37)  |
| 머니투데이 | 21%    | 10%  | 10%   | 21%    | 38%  | 100(39)  |
| 이데일리  | 21%    | 9%   | 3%    | 32%    | 35%  | 100(34)  |
| 오마이뉴스 | 21%    | 32%  | 9%    | 19%    | 19%  | 100(53)  |
| 합계    | 20%    | 22%  | 7%    | 24%    | 27%  | 100(252) |

매체별 차이는 ‘정서악화’ 프레임과 ‘정책실패’ 프레임의 비중을 통해 가장 쉽게 확인된다. 위의 <표7>에 따르면 ‘정서악화’ 비중이 가장 높은 신문은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로 그 비중은 각각 38%와 35%에 달했고, 그 비중도 19%인 <오마이뉴스>와 20%인 <경향신문>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다. 이와 달리, ‘정책실패’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매체는 32%의 <오마이뉴스>와 28%의 <경향신문>이었다. 물론 <동아일보>의 ‘정책실패’ 비중은 27%로 <경향신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정책실패’는 대통령과 정책담당자들이 위기발언을 너무 쉽게 한다는 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정부가 과담의 진원지를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과는 달랐다. 반면 <경향신문>의 ‘정책실패’ 프레임에는 ‘촛불시위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가 위기론을 부추겼다는 점,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점 및 정직한 위기의식을 결여하고 위기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점’ 등의 주장이 담겨있다. 그 밖에, 경제전문지의 경우 ‘글로벌리스크’와 ‘펀드멘탈악화’ 프레임의 비중이 높았고, 이는 이들이 경제지표들에 근거해서 위기설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경향신문>에서도 ‘글로벌리스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합지의 특성으로 인해 <경향신문>에서 상세한 경제지표는 많이 인용되지 못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해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기설의 원인이 한국경제의 ‘펀드멘탈’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표 8> 매체별 ‘책임’ 프레임

|       | 정부책임 | 글로벌책임 | 시장책임 | 외국인책임 | 위기조장세력 | 합계       |
|-------|------|-------|------|-------|--------|----------|
| 동아일보  | 37%  | 20%   | 13%  | 17%   | 13%    | 100(30)  |
| 경향신문  | 57%  | 29%   | 5%   | 9%    |        | 100(21)  |
| 매일경제  | 40%  | 30%   | 15%  | 10%   | 5%     | 100(20)  |
| 머니투데이 | 13%  | 30%   | 22%  | 22%   | 13%    | 100(23)  |
| 이데일리  |      | 69%   |      | 31%   |        | 100(13)  |
| 오마이뉴스 | 57%  | 28%   | 7%   | 4%    | 4%     | 100(28)  |
| 합계    | 37%  | 31%   | 11%  | 14%   | 7%     | 100(135) |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매체는 31%의 <이데일리>, 22%의 <머니투데이>와

17%인 <동아일보>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아일보>와 <머니투데이>는 ‘위기조장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고, 그 비중도 13%대에 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가장 많은 37%였으며, 그 비중은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도 정부에 대한 비판 정도는 높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데 동원되는 ‘평가기준’에 있어 이들과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동일한 기사에 여러 프레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동일한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별로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 3) 담론전략의 이해

담론전략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단어를 쓰거나, 독특한 해설을 첨가하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틀짓기, 특정한 평가잣대 제시하기 및 정보원의 전략적 활용과 같은 언론의 전략에는 이러한 세부적 방법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위기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 (1) ‘위기설’에 대한 정의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위기설’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정부’는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먼저 <경향신문>에서 ‘도약기’와 성숙기 동안 9월 위기설은 “펀드멘탈 타령, 강만수 경제팀 전면 수술만이 해법이다, 고집이 부른 화, 정직한 위기의식” 등의 제목을 통해 규정된다. 후퇴기에 들어서도 “외환시장 부추기는 정책 불신, 더 큰 위기 부를 선제적 조치” 등의 제목이 이어진다. 이와 달리, 성숙기 동안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은 “9월 위기설 자라인가 솟뚜껑인가, 9월 금융위기설 가능성 낮지만 설 자체가 위기조장, 영성한 위기설이 먹히는 까닭” 등이었다. 위기설이 불발로 끝난 이후에는 “9월 위기설 누가 웃고 누가 울었나, 외신의 오보 대응 역량에 문제없나, 약세장 외환투기꾼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시장 교란하는 위기과정세력 배격해야” 등으로 제목을 뽑았다.

전문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의 담론 경쟁도 뚜렷했다. 위기설을 처음부터 강하게 비판해 온 <머니투데이>와 위기설을 옹호했던 <오마이뉴스>의 기사제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먼저 <머니투데이>는 “당국, 9월 위기설에 가용카드 총동원, 외인 보유채권 만기 불안,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등으로 도약기를 장식한다. 뒤이은 성숙기의 제목도 “9월 위기설의 실체는, 9월 위기설 외국인 작품? 9월 위기설의 진짜 주범은 언론, 9월 위기설 유명인가 현실인가” 등으로 나타난다. 또 후퇴기에 접어들어서는 “소문이 문제다, 투매 악순환,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자” 등의 제목을 제시한다. 반면에 <오마이뉴스>는 “9월 위기설이 설득력 있는 이유, 9월 위기설의 근본원인은 정부에 있다, 위기설보다 강만수가 더 무섭다” 등의 제목으로 성숙기를 장식한다. 그리고 위기설이 지나간 이후에도 “강만수 경제팀, 폼 잡다가 시장에 밀려 IMF 못지않은 고난의 세월이 다가온다, 비상 거국경제내각 구성을 촉구한다, 강만수 대신 미네르바를 앉혀라” 등의 제목을 달고 있다.

9월 위기설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데일리>와 <매일경제>는 ‘위기설’을 거부하는 쪽이었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시각은 점차 변해갔다. 도약기만 하더라도 <이데일리>는 “9월 위기설 왜 나오나, 9월 위기설 근거없다 … 금융위도 진화에 나서” 등의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9월 위기가 후퇴기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환율폭등 재연, 손대는 것마다 망가졌는데, 9월 위기는 있었다, 꼬리 무는 위기설, 외화유동성 위기설 증폭”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매일경제>도 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9월 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목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엇갈린 수수께끼, 은행 외화구하기 총력전 나섰다, 9월 위기설 돌파할 정책신뢰를” 등이었다. 그리고 막상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금융시장 패닉 확산 막아야, 시장에 부화뇌동하면 낭패 볼 수도, 한국 어렵지만 위기 아니다, 악의적 유동성 괴담 방치해선 안된다” 등의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9월 위기가 지나고 나서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부터 “위기설 키우는 청와대의 4가지 오류, 글로벌 경제와 위기관리능력, 위기설의 실체는 신뢰의 위기 및 위기관리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등 정부의 리더십을 비판했다.

## (2) ‘금융시장’에 대한 해석

금융시장의 동향과 여론조사의 향방은 비슷한 점이 많다. 먼저, 둘 다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에 극히 취약하다는 약점을 갖는다. 즉 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작은 국기들의 금융시장은 주기적인 공황과 투기의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반영하는 여론조사도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 둘째, 일상적인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도 공통된다. 필요한 정보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의 특성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특정 세력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국제투기자금(하터니)의 공격으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한 것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자주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합리적인 대중의 집단적 자각의 결과’ 즉 ‘진정한 여론’으로 오용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그로 인해 주식과 환율의 등락은 곧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실질적인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위기설을 둘러싼 담론에서 언론사들 간 ‘시장=공중=여론’이라는 도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위기설’은 보는 입장에 따라 괴담 또는 실질적인 징후 등으로 다르게 해석된다. 금융시장의 불안 역시 다양한 변수에 의한 시장참여자들의 ‘과잉반응’(즉 패닉) 또는 실물경제에 대한 ‘시장 여론’으로 다를 수 있다. 당연히 ‘위기설’의 실체를 수용하는 측과 거부하는 측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기설을 적극 받아들였던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경향신문>은 “외부환경 탓하는 정부로 인해 한국경제는 투자자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는 지경,”(08/9/4) “정부는 9월 위기설의 근거가 부족한 낭설이라고 일축하지만 시장은 정부에 믿음을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08/9/4) 또는 “성장을 집착에 빠진 강만수 경제팀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 올렸다. 시장의 반란은 그때부터 시작됐다”(08/9/8)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이 주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은 외국인과 국내투자자들의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위기설은 이러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시장’에 대한 이러한 신념은 <오마이뉴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한 직후 <오마이뉴스>는 “정부를 믿지 못한 것이죠 어제 그 상황은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섰다고 봐야지. 누구는 **시장의 반란**이라고 하던데”(08/9/3)라고 한 익명의 전문가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9월 위기설의 본질적 원인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정책과 위기조장 그리고 위기관련 능력 부족 등이지 만기가 도래하는 67억 달러의 채권이 아니다”(08/9/4)는 주장을 인용했다. 여론과 시장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9일부터 11일까지는 한국경제 **심판의 날**이다”(08/9/9) 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08/9/2)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머니투데이> 등은 이와 달리 ‘시장’의 왜곡과 과잉반응을 지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아일보>에서 위기설은 “한때 기승을 부린 괴담, 위기설이라는 구미호, 가정들이 비현실적인 위기설, 비이성적인 설로 인해 국부를 축내는 일, 실제보다 부풀려졌던 위기설” 등으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시장의 오류 또는 공황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설이 괴담 수준으로 번진 과정에서 나라 안팎 일부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작용한 흔적도 감지된다. 일부 국내매체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일부 외신보도를 비중 있게 전해 결과적으로 위기설을 부풀리고 불안심리를 확산시켰다(동아, 08/9/4).

외국인 음모설과 위기조장세력을 제기하는 한편, 시장의 실패 또는 시장의 과잉반응을 우려하는 시각은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등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들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위기설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과장된 설” 또는 “근거 없는 9월 위기설이라는 악령” 등으로 우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무릇 경제란 심리가 반인데 안 좋은 거시경제 환경에서 그나마 심리마저 공포 권역으로 돌아서면 자가발전에 의한 위기가 정말 현실화 되거나 없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불안이 불안을 재생시키고 공포가 공포를 확대시키면 균중심리란 걸잡을 수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08/9/9).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쏠림은 다분히 자기실현적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듯하다. 위기설과 함께 불안정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 불안전성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주체가 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시장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 08/9/3)

### (3) ‘위기설’에 대한 전망

앞서 <표 4>의 담론구조에서 밝혀진 것처럼 위기설에 대한 특정한 세계관은 위기설에 대한 전망도 포함하고 있다. 즉 위기설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큰 것으로 인식되고, 보다 ‘총체적인 위기’로 보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반대로, 과잉반응 또는 불순세력에 의한 일시적 왜곡에 의한 것으로 위기설을 인식하는 입장에서 ‘위기’는 좁은 의미로 정의되고, 위기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위기설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향신문>은 “(2008년 9월에)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이후 이러한 전망은 “위기 연쇄론은 오늘날 세계경제의 키워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데도 애써 위기론은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소위 위기불감증 현상이다”(08/9/11)로 변한다.

반면에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 등에서 위기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8월 29일 <머니투데이>는 “만기가 1년 내 돌아오는 유동외채 규모가 외환보유액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유동외채와 외환보유액을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 당장 유동외채 전액을 외환보유액으로 갚는다는 가정 자체가 어불설성이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9월 1일에는 “위기설은 과장됐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우선 외국인이 8월 들어 채권을 다시 순매수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다. 외환위기의 고통을 겪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측면도 위기설 증폭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누차 말하지만 9월 위기설은 없고, 문제없이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매일경제>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9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어느 쪽이 더 클까. 두 가지 모두 계산하기 어렵지만 확률상 제로에 가깝다는 데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08/9/4)고 주장한다.

담론이 살아있고,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은 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위기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다음 위기설을 적극 옹호했던 매체들은 어떤 식으로 ‘신뢰성’(credibility)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까? 또 위기설을 부정했던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이 구성한 담론의 정당성(legitimacy)을 강화하고 있을까? ‘후퇴기 또는 소멸기’에 이들 위기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 (4) ‘위기설’에 대한 사후평가

위기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후퇴기에 접어들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나 보도량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담론을 통한 ‘정당화’ 기제는 작동했다. 정당화 전략은 크게 위기설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거나, 위기설이 오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실책을 더 강조하거나, 위기설이 여전히 옳았다고 강변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략은 <경향신문>의 아래 글을 통해 잘 드러난다.

우리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만 유독 외부 충격에 약하고 위기설이 이어지는 현실을 시장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금융위기 대처를 잘했다는 식의 자화자찬과 낙관론만 늘어놓는다면 시장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08/10/4).

세계적 흐름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한국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스템이 조정되는 동안 더욱 위태로울 수 있다. 위기대응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집권세력은 먼저 위기의 ‘내 탓’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08/11/5)

<오마이뉴스>도 이와 유사한 정당화 기제를 동원하고 있다. 위기설이 불발로 끝난 직후인 9월 11일 김중철은 “10일 이른바 9월 위기설은 말 그대로 설로 끝났지만 정작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것이 이들(홍종학, 유종일, 장상환 및 김상조 등 진보성향의 교수들)의 진단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인 9월 12일에는 “우리 경제의 9월 위기설은 설로 끝났고, 대통령도 위기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기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그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긴장하라고 한 말이었다고 에둘러

갔다. 허허 헛웃음이 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발 서브모기지 프라임 위기와 9월 위기설을 연결하려는 다음과 같은 시도도 발견된다.

“주가는 500포인트로 떨어지고, 부동산 값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하자 많은 언론이 이를 주목했다. 이젠 강만수 장관 퇴진론도 모자라 강만수 장관 대신 미네르바를 경제관료로 앉히자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08/11/25)

그러나 <동아일보>에서 위기설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기에서 위기는 “불과 두 달 전에도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시장 9월 위기설을 퍼뜨려 채권가격을 떨어뜨린 뒤 혈값에 싹쓸이 해 갔다”(08/10/16) 또는 “9월 위기설이 정부 당국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름으로 포장돼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다가 헛소문으로 판명난 게 불과 한 달 보름 전의 일이다”(08/10/28) 등으로 해석된다.

## 5. 결론 및 함의

### 1) 연구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설로 인해 막대한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기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며, 소멸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이에 위기설을 담론의 하나로 전제하고, 2008년 ‘9월 위기설’을 분석사례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진단, 처방 및 전망’ 정보 등이 담겨져 있는 기사를 중심으로 샘플을 수집했고, 최종적으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와 <오마이뉴스>의 관련 기사 118개를 분석했다. 위기설 담론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레임 중심의 한 내용분석을 우선 실시했고, ‘위기설에 대한 정의, 시장에 대한 해석, 위기에 대한 전망 및 위기설에 대한 평가’ 등의 질적 분석을 추가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위기설 담론의 토대에는 위기설에 대한 입장, 정부에 대한 태도와 시장정서에 대한 입장으로 조합된 특정한 ‘세계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위기설의 진행 정도와 매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위기설이 처음 등장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인 ‘도약기’에 있어 위기설에 대한 관점은 비교적 중립적이었다. 당연히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도 높지 않았고, 시장의 움직임도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위기설이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된 성숙기 동안 위기설은 보다 적극 ‘수용’되는 쪽으로 변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고, 시장정서의 악화 에 대한 경고는 줄었다. 그리고 위기설이 소멸되면서 위기설에 대한 관점은 점차 ‘거부’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위기설’을 경험한 이후 집단적인 인식과 태도는 그 이전과 같지 않았다.

둘째, 매체에 따라 위기설을 대하는 관점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달랐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위기설은 보다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위기설이 후퇴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에 비교적 호의적인 <동아일보>에서 위기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인터넷매체와 일반 종이매체 간의 차이보다는 종합일간지와 경제전문지간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와 <매일경제> 그리고 <머니투데이>의 관점은 비교적 유사했다. 하지만 경제전문지 중에서도 <머니투데이>는 위기설에 가장 비판적이었으며, <매일경제>와 <이데일리>는 9월 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실패’를 보다 강조하기 시작했다.

셋째, 매체별 차이는 프레임 분석을 통해 우선 확인되었다. 위기설을 수용했던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에서 ‘정책실패’ 프레임의 비중은 높았고, ‘시장정서악화’ 프레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아일보>와 <머니투데이>에서 이들 프레임의 비중은 정반대였다. 경제전문지들의 경우 ‘펀드멘탈악화’와 ‘글로벌리스크’ 프레임을 더 높은 비중으로 채택했고, 이는 경제지표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제지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파악된다. 책임소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되었다. 당연히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주된 책임소재는 ‘정부’에서 찾아졌고, <동아일보> 등에서는 외국인과 위기조장세력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실패’ 프레임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판단의 근거도 아주 다양했다. 즉 언론사들은 각자의 프레임에 적합한 제목을 선택했고,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해석을 동원했다. 또 금융 ‘시장’에 대한 해석도 언론사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내걸고 있는 <오마이뉴스>에서 시장은 곧 ‘여론’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의 동향이 해석되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와 <동아일보> 등은 공중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가정을 가졌고, ‘시장’은 왜곡될 수 있고, 정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위기설에 대한 전망도 매체별로 달랐다. <경향신문> 등에서 위기설은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 반면 <동아일보>에서 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설 자체가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쳐졌다. 9월 위기설의 주요 내용이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사들의 입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에서 위기설은 실제로 실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머니투데이>에서 위기설은 잊을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유행과 같은 존재로 해석되었다.

## 2) 합의

‘위기설’이라는 담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적 후원그룹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언론이 단순히 이들 정치세력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기보다는 ‘자율적’인 주체로서 ‘담론경쟁’에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준다. 친여당이었던 <동아일보>의 담론은 위기설의 실현 가능성을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의 쏠림 현상을 우려했던 정부의 시각과 거의 동일했다. 또 경제엘리트들을 주요 독자로 하면서 국내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광고수익에 많이 의존하는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 등도 ‘위기설’에 비판적이었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친야당지로 알려진 <경향신문>의 경우 ‘위기설’을 보다 넓은 의미의 경제위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위기설’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오마이뉴스>의 담론도 <경향신문>과 유사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라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이데일리>와 <오마이뉴스>의 입장 차이는 상당했다. 두 매체의 핵심 독자층이 다르다는 것과

시민기자가 많이 기고하는 <오마이뉴스>와 달리 <이데일리>는 여전히 전문적 저널리즘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설이 역사적으로 진화하고 그 내부에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담론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경제위기설에 제한해 봤을 때 첫 번째 개입점은 언론의 지속적인 ‘정부 때리기’ 부분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 상실은 금융시장을 더 큰 혼돈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독점적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시장이 좌우될 수 있는 개연성을 키운다. 물론 정부의 정책 실패나 리더십 부족은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정부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의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가령, 이번 위기설에 있어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정책 또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신장섭, 2009).

둘째, 비록 주식의 폭락이나 환율의 급등이 정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 만약 이 논리를 따른다면 2009년 8월 이후의 금융시장 폭등은 정부와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과 여론의 무한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금융시장의 동향과 여론을 동일시하는 것은 ①국내 선물시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해 금융시장의 투기화가 심각하고, ②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이 월가에 종속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내부적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부침을 거듭해 왔고, ③달러화 중심의 자율변동환율체제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④ 금융시장의 불안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이 실제 존재한다는 등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임종인·장화식, 2008).

셋째, 위기설 담론이 지나치게 정치화 되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정부에 대한 태도는 위기설에 대한 관점과 일치했다. 당연히 이 관점에 부합하는 ‘경제지표’들이 자의적으로 ‘취사선택’되었고, 이 관점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위자’들이 우선 인용되었다. 더구나 이렇듯 정치화된 담론은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했다. 예를 들어, 국·공채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에는 태국과 브라질 정부도 있고, 이들이 단기투기 자금들과 손을 잡고 일시에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나 9월 위기설을 다루면서 외국계가 누구인지, 단기외채가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나아가 외환보유고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국가재정에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되는지 등은 거의 분석되지 못했다.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전문가를 다양하게 인용하고, 각 관점을 지지하는 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정한 프레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고급담론’ 경쟁이 시급한 시점이다(윤덕룡 외, 2009).

넷째, 적절한 사전개입, 효율적인 정책과 냉정한 대응을 통해 위기 자체가 ‘방지’되거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지나친 위기경보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의 위기설은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주변 여건도 나쁘지 않았다. 또한 국제유가의 상승과 수출경기 악화 등에 따른 단기적 경상수지 적지는 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은 ‘발견’되기보다는 ‘구성’되는 측면이 더 많으며, 한국과 같은 개방형 경제에 있어 언론의 지나친 비판은 쉽게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동맹국가그룹(G77)을 중심으로 서방언론의 부정적 보도

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경제 위기설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방어와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 2001년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도 미디어외교를 통해 자국의 장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김성해·강국진, 2009).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외교는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프로파간다가 아닌 진실에 바탕을 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울 만하다(김성해·김동운, 2009).

끝으로, 국내외 언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는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그 본질이 끝없이 변하고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관점의 차이도 불가피하다.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역할은 따라서 의견이 다른 언론사를 비판하고 ‘사실’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즉 정부는 언론이 기꺼이 찾으려고 하는 ‘잘 정리되어 있고, 믿을 수 있고, 활용하기 편리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채널을 통해 ‘일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모든 문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비판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 Ⅰ 참고문헌

- 강명구 (1994).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위기의 현실구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3권, 92~131.
- 강명구·박상훈 (1997).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한국사회학』, 31집 봄호, 123~159.
- 기획재정부 (2008.9.5). 9월 위기설 관련 4가지 오해와 진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김대영(2004). 박정희 국가동원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61권, 184~221.
- 김성해·강희민·이진희 (2007).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담론: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의 수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5권 4호, 39~85.
- 김성해·강국진 (2009).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 김성해·김동운 (2009). 금융위기와 언론: 2008 글로벌 위기에 대한 각국 언론의 보도양상과 프레임. 『언론과 학연구』, 9권 4호, 98~134.
- 김영선 (2008). 경제위기 이후 경영담론 내 휴가담론의 성격에 대한 시론, 『노동연구』, 16호, 53~80.
- 김원용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3.
- 백선기 (2005). 『전쟁보도와 미디어담론: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디어 담론 구조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선북스.
- 삼성경제연구소. (2008.9.8). 현 금융불안 현상진단 및 처방. 『SERI 경제 포커스』, 209호.
-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권 2호, 55~89.
- 서덕희 (2006). ‘교실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홈스쿨링에 대한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권 1호, 77~105.
- 신장섭 (2009). 『금융전쟁, 한국 경제의 기회와 위협』. 청림출판.
- 양정혜 (2000). 대중매체의 의미화 전략과 헤게모니. 『언론과 사회』, 29호, 43~84.
- 우리투자증권 (2008.8). 금융위기 가능성, 두 개는 No, 하나는 잠재적 가능, 투자보고서.

- 윤덕룡·오승환·이호진 (2009.12.30).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 KIEP 연구보고서 09~17.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 이동후 (2003). 국가집합 기억의 재생산. 『언론과 사회』, 11권 2호, 72~110.
- 이승민 (2003).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갈등구조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4호, 46~93.
- 이준웅 (2009).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 개의 별, 『커뮤니케이션이론』, 5권 1호, 123~166.
- 이향진 (2003). 북한-유럽 연합 외교 정상화와 불량국가 미디어 담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2호, 83~112.
- 임종인·장화식 (2008). 『법률사무소 김연장』. 후마니타스.
- 조영권 (2006) 미디어 정치담론 분석 방법론 연구-페이클라프의 비판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1권, 19~41.

- Bell, A. & Garrett, P. eds.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London: Blackwell Pub.
- Dijk, V. (1988). *News as discours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airclough, 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Gamson, et al. (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8.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Vintage Books
- Hall, R. (2003). The discursive demolition of the Asia Development Mode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7), 71~99.
- Hall, S. (ed.)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Pub.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ick, E. (1999). "Sense-making as an organizational dimension of global change," In David, L, C. & Jane, E. (Eds.), *Organizational Dimensions of Global Change*. (pp. 39~58). Thousands Oaks, CA: Sage.

(투고일자: 2009.11.25, 수정일자: 2010.4.12, 게재확정일자: 2010.4.17)

ABSTRACT

## Discursive Politics of the Media and Economic Crisis: A Case Study about “Korea’s September Crisis in 2008”

Sung-Hae Kim\* · Chun-Sik Kim\*\* · Hwa-Nyeon Kim\*\*\*

Korean society, suffered from a severe currency crisis in 1997, had scarcely missed another market meltdown in 2008. However, neither economic fundamentals nor has political stability little to do with the recent crises. This paper thus projects the possibility of ‘self-fulfilling crisis’ in which the media took a critical part in amplifying ‘crisis discourses.’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of media’s impact on such a crisis, at first, this paper chose ‘September Crisis in 2008’ as a case study. While collecting news articles about the crisis, then, total 118 news articles collected from mainstream newspapers such as *DongA-ilbo* and *Money Today*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media frame and discourse strategie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not only has the crisis discourse been shifted by economic situations, but the media re-constructed economic realities in way of justifying their political ideology and loyal readership. Taking those findings into consideration, in final, the authors urged the media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embracing more responsible and professional manners.

Keywords: Discourse Politics, Economic Crisis, Media Discourse, Frame, Political Partisanship, Discourse Competition

---

\* Sun-Hae Kim, Visiting Research Fellow, Korea Press Foundation  
\*\* Chun-Sik Kim,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wa-Nyeon Kim, Senior Researche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